

정부 규제개혁 천명 6개월 ... 광주·전남엔 '헛구호'

광주 동북호 물 부담금 완화 수용 안돼

대불산단 군사구역 해제 거절 당해
목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불가능

영암 대불산단 '전북대 뿔기'를 시작으로 정부 규제개혁을 천명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광주·전남 등 비 수도권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에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발목을 잡은 핵심 규제 39건 가운데 수용불가 19건, 장기 과제 5건 등으로 비수용 비율이 61%에 달했다. 전남도의 경우도 57%가 수용되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규제가 쯤썩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방투자환경 개선이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여전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의 규제 실상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광주시=시는 영산강 동북호 물 이용 부담금의 완화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동북호는 광역상수원이 아닌데도 물 이용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상수원에 비해 비싼 물이용 부담금으로 광주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구비 서류 축소 건의도 수용되지 않았다. 현행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구비 서류 요

건은 출가한 딸(사위 포함), 친 부모에 대해 금융거래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재산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공익을 위한 토지개발을 묶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3대강 수계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규제 완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시행중인 수질 오염 총량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수질 유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측정기 설치를 탄력적으로 하도록했으나 규제를 풀지는 않았다.

◇전남도=도는 광주·전남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 산단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대불산단에는 해군 탄약창(제한보호구역)이 존재, 그 일대 폐기물처리장 부지 및 주변 공장용지 27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장건립은 물론 입주업체

■풀리지 않는 광주·전남 주요규제

광주	전남
개발제한 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용	대불산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영산강 수계 동북호 물이용 부담금 부담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택지조성시 농지보전금 감면
3대강 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규제 완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보육시설인가 설치서류 완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어장연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신청 구비서류 축소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들의 건축행위 등이 제한돼 있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전체 해제가 어렵다면 산업용지(6만6천㎡)만이라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목포공항은 국방 업무상 기지종류가 '헬기전용기지 겸 비행장'로 구분, 공항 주변 삼호지방산단지 일부가 고도제한 규제로 묶여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한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안운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연합뉴스

■국토해양부, 국토관리 지방화 대책

국토해양부가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및 그림과 함께 국토관리체계의 지방화 대책을 제시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는 규제 개혁과 관련,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토지이용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토지이용절차 간소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 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 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법령 위임없이 지침을 통해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

도록 하고 향만구역 내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층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했으며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업무 지자체 넘겨

“당헌·당규 따라야” “직무대행 체제로”

한, 도당 위원장 선출 집안싸움

한나라당 전남도당이 신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28일 “박재순 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달 17일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뒤 4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도당위원장이 공석이 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후임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남도당은 선출기한인 지난 25일까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해 중앙당으로부터 사고 도당으로 지정될 처지다.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장 선출을 논의할 운영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는 쪽과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는 운영위원들로 나뉘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잡혀있던 운영위원회도 일부 운영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도당 안팎에서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전남지역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부 현직 최고위원들이 도당위원장 선출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갈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전남도당이 집안 싸움으로 주요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전남도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당을 사고 도당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없이 중앙당이 도당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후반기 의장 선거 금품 로비설
광주시의회 ‘뒤송송’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로비설로 잡음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이 “지난 의장선거 과정에서 B의원이 돈 보따리를 가져와 되돌려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설(說)’이 떠돌면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A의원은 이와 관련, “때로는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그러한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돈을 제공하려 했다는 구실에 휘말린 B의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극구 부인했다.

이 같은 설이 떠도는 데 대해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장단 선거와 최근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에 쌓인 갈등에 기인한 것

이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교사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현장 활동 계획도 뒤늦게 수립하는 등의 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아예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날 위원장 선거 여파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데다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부득이하게 사일정을 오후로 연기했다”면서 “이후 진행될 의사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혼여행·가족여행·개별여행은 편리한 무안공항에서 출발!!

무안국제공항출발

2008. 10. 12~12. 19

매주 일요일 (4박 5일) 저녁 9시 45분 출발
매주 금요일 (2박 3일) 아침 8시 출발

■ 홍콩익스프레스항공(이) 전세계

- 4박5일 출발 : 10.12.19.26.31.11.2.9.16.23.30.12.7.14.21.28
- 2박3일 출발 : 10.13.20.27.11.3.10.17.24.31.12.1.8.15.22.29
- 기... (중략) ...

발리
홍콩
푸켓
파타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면 좋은점!

-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면... (중략) ...